

[보도참고] 제1차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 주요 발언내용

[금융계]

- 「디지털금융 협의회」가 시의적절하게 구성된 점에 감사
 - “가보지 않은 길”을 가는 과정에서 정책적 선의가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,
 -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간 원활한 소통창구가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
- 금융계에서도 혁신의 속도를 늦추거나 핀테크 기업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을 원치 않음
 - “One Team”이 되어 건설적 논의 진전을 희망하는 한편,
 -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당부

[빅테크·핀테크 업계]

- 금융사나 빅테크 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원칙에 동의
- 다만, 빅테크 혁신이 디지털에 기반하고 있어 기존 금융권 입장에서 빅테크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낄 수 있음
- 금융권-빅테크 간 각자 입장에서만 주장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,
 - 이 경우에는 “소비자 후생”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
- 빅테크·금융권이 경쟁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건설적인 관계가 되기를 희망

[전문가]

-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논점을 제시
 - (공정규제 환경) 경쟁 활성화 위해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이 중요
 - (소비자) 디지털 금융사고 배상책임, 고령층 소외, 거래의 안정성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의 논의 필요
 - (데이터) 정보 보호, 생산·수집자의 수익성 등 “동태적 관점”에서 데이터 활성화 고민 필요
 - (경쟁법) 금융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적으로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갖추어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가능
 - (글로벌) 해외 플랫폼이 국내시장 진출시 산업 영향도 고려
 - (기타) 폭넓은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긴밀한 소통 중요

[노동]

-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점에 대해 감사
- 디지털화 논의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“사람이 소외되지 않는” 혁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
- 노동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지만, 상호 이해와 존중 아래 “문제 해결”이 되도록 논의에 적극 임하겠음

[금융당국]

- 업권에서 느끼는 변화에 대한 불안감과 절박감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, 공론의 장에서 해소하는 것이 중요
- 특정방향을 정해 정부가 논의를 이끌기보다 업계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
- 금융위·금감원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해나가겠음